

#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의 방향

-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 조정실 -



● 우리 농업이 당면한 위기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되는 세계화 자유무역, 시장주의, 무한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반농업세력의 농업희생 강요에 있다.

- 편집자 주 -

## 1.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올 한 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중국마늘 긴 급관세 부과와 관련한 통상마찰과 한·칠레 FTA 타결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심지어 2004년 쌀재협상에 임하기도 전에 관세화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 주소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농업이 당면한 위기 상황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장주의, 무한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

유주의가 정부와 각계 각층에 만연되고, 이를 통해 농업경시세력들이 농업무용론을 주창하며, 농업의 입지를 갈수록 약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세계화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강자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 논리는 국가간이든 국내 산업간이든 여전히 '천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 FTA 타결의 이면에는 언제나 농업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희생이 강요되었고, 그 때마다 정부는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지만 늘 생색내기식에 불과한 빈 껍데기 대책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2.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될 농정 방향

지금 세계 각국은 만성적인 농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세계 각국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국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통상마찰까지 감수해 가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혈안이 된데 반해, 우리 정부는 각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각종 허용대상 정책을 2000년이 되어서야 도입하기 시작하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시장지향형 농정'이라는 논리를 들면서 마치 '우리 농업이 정부의 과잉보호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시대착오적인 억지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은 세계화의 본질과 세계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전략을 호도하고 있는 농업경시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되어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계화 추세 속에 타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비경제적인 투자 분야로 농업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호시탐탐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과 국가를 초월한 다국적 자본과 기업의 교묘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대세인 DDA 협상과 FTA 추진을 앞두고, 400만 농민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취임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정부관료의 경우 국가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외면한 채 사양산업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천덕꾸러기 산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농정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가 농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일관된 농업 정책이 생산될 수 없으며, 결국 빈껍데기에 불과한 전시 행정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부터 농정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농업관을 가져야 하며, 비농업 분야의 관료들 역시 농업의 역할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1)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과 그 생산기지로 보느냐,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이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농정 방향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으며, 양 시각에 따른 농업의 가치 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벤처산업이나 IT산업만큼 우리 농업 역시 우리 민족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임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국가의 존립기반 유지와 국민의 식량산업 유지를 위한 농업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농촌이 존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금이라도 계량화 작업을 통해 그 진실된 가치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농업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번 16대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쌀을 포함한 적정한 식량 자급목표와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차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출하라고 한농연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될 것이다.

### 2) '선택과 집중'의 논리보다는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를 농정목표로 삼아야 한다.

최근 정부 일각이나 경제당국에서 정책의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이미 농정의 주요 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바로 농업관련 예산의 축소와 농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하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 결국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렵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소수의 선택받은 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서, 이는 곧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적어도 전체 농가 중에서 60대 이상이 40%에 육박하고, 경지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가 35%나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는 농민의 자율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농업을 끌여가는 한마디로 현대판 인클로저(Enclosure) 운동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차기 정부의 농정 목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은퇴하는 농가나 어쩔 수 없이 탈락과 소외되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 역시 함께 병행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농민·농업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농촌은 의료와 교육, 문화, 생활환경 등 각종 삶의 질에서 도시지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젊은 농민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40~50만명의 농민들이 이농하고 있어 도시 과밀화의 주된 요인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개선, 농어촌소규모학교 유지, 농촌의료 개선, 대학특례입학 확대, 농촌 정보화 등 종합적인 농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자체를 지금까지의 대도시 및 성장거점도시 위주에서 벗어나서 농촌지역을 배후로 한 지방중소도시를 그 지역의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에 들어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세금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식량안보는 이제 국가의 주권 발현이자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지역별로 기아와 포식이 공존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교역자유화를 통해 이러한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되는 현재 매년 기아로 인해 3,600만명, 한 시간에 4,000여명이 굶어 죽어가고, 미국인들은 불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년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하는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 속에 과연 어느 나라가 식량주권을 남의

나라의 손에 맡겨두려 하겠는가? 선진국이 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 농업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농촌을 유지시키고,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려 하는가?

소위 '개방화'가 대세라고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이 물음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할 경우 자급률이 약 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이제 수입 장벽을 허물고,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된 수입농산물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식량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이 없으면 농업 생산을 포기하고, 달러가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식량수출국들의 교역자유화와 시장논리에 맞서 지난 3월 18일 유엔 인권 위원회에 “식량은 인권”이라고 주장한 장 유엔 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량문제를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각국의 식량 확보 노력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농업생산 보호를 위한 보조금은 감축대상이 아니라 장려해야 할 정책이 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직결된 주곡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국경보호 역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차기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5) 선진농업국의 경쟁력은 바로 보조금에서 나온다.

미국, EU 등 소위 선진국들의 농업 경쟁력은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나라는 주요 곡물을 생산비 이하의 싼값으로 수출하고, 곡물메이저 회사들과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규모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저의는 바로 우리나라와 같이 구매력이 있는 농산물 수입국의 생산기반을 와해시켜 자국산 잉여 농산물로 세계 농산물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내 다양한 산업 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분야는 유일하게 농업뿐이라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농업위기는 국내 농정의 부재로 인한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 농민들을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내몰면서도 선진국이 수십 년전부터 시행해왔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보조금 정책을 외면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우리 농가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개방화시대, 경쟁력 지상주의 시대에 단지 평가절하된 농업의 산업의 가치만 가지고 정책 수립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한다면 차기 정부의 농정 역시 역대 정부와 별 차별성이 없어 농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농림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대비 10%대로 확충시켜야 함은 물론 농어촌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어촌 특별세의 사업 기간 연장 및 운영방안 혁신과 현행 예산과 별도로 새로운 투융자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없는 말뿐인 농정공약은 이제 더 이상 농민들이 속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농연**